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의대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음 2월 9일) 제22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 '길 열렸다'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

지역 특수성·균형발전 감안, 전주시 요구안 반영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이 전주시의 요구안을 반영키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도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당·정·청 안팎의 중론이다.

그동안 시는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보다는 종합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는 전주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4개 기관이 들어서 있어 중심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원·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은 수다.

전주는 또 인구는 약 65만 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 이른다. 실제,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평균 94만 명, 최대 105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전주는 전주한옥마을에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 국내 행정전문가들도 그간 열린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단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 정부안보다는 생활인구와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가능성 1%를 두고 특례시 지정에 사력을 다해왔다. 오늘 당정청 회의를 통해 희미하나마 약간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며, "'처마 끝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가겠다. 반드시 전주특례시 지정을 성공시켜 50년 낙후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社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조건
지역주재기자	익산 0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접수기간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1통,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 주 매 일

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추진

노사민정협의회서 의결

전북도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러한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지 않아 지역경제 회복시까지 지정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날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상생과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소통' 다짐

전북도 올 첫 민생경제원탁회의

전북경제 발전 대응방안 정보 교류
송하진 지사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전북 대도약 발판 놓아"

전북도는 1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전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를 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48개 회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공유와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하여 경제관련 기관·단체장과 함께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확정으로 전북 대도약을 향한 발판을 놓았다"고 말하며 성원해 주신 도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민생경제원탁회의가 활발히 운영되어 전북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경제성장 전망과 도내 경제현황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과 함께 협력과 소통으로 전북경제 대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김진성 기자